▢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1. 출제의도

개인의 윤리적/비윤리적 의사결정과 행동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묻는 질문으로, 본질적으로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체로서의 개인과 사회를 설명할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비판적이고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즉, 개인의 윤리적/비윤리적 의사결정은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2. 문항해설

- 고등학교 교과과정 중 사회문화 과목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인 사회실재론과 사회명목론을 소개하고 있다.

- 우선 '사회실재론'에 따르면 사회는 그 구성원인 개인의 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구조나 사회의식이 있기 때문에 개인을 초월하는 독립된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실재론은 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한 사회의 제도나 이념 등이 개별 구성원의 의식과 행동을 구속하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사회를 중심으로 사회현상을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이론은 사회의 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개인은 사회에 묻힌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 반면 '사회명목론'은 사회가 그저 개인들의 모임에 지나지 않는 명목적인 존재라고 주장한다. 개인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며 중요한 것은 개인의 특성과 행동 양식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적인 단위는 각 개인일 뿐이어서 사회현상은 개인의 심리적 요소나 행위 양식을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종종 개인이 사회 구조와 역사를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귀결되기도 한다.

- 가장 이상적인 접근방법은 위의 두 이론처럼 개인과 사회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보다 비판적이고 통합적이고 이해하려는 태도이다 (사회문화 65쪽)

- 이를 위해서 우선 (나)-(마)의 각 제시문이 사회실재론적 주장인지 사회명목론적 주장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결론적으로 (가)의 주장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하면서 보다 통합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 (가)에서 제기된 주장은 외교관의 위법행위(비윤리적 행동)가 출신 국가의 사회, 문화의 부패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회실재론적 주장이다.

- (나)와 (다)는 (가)의 사회실재론적 주장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이다. 우선 (나)는 이이의 경장론의 일부에서 발췌된 제시문으로서, 국가의 중대한 일 중의 하나가 훌륭한 통치 제도 혹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사회실재론적

주장으로 제도나 시스템이 국민 개인의 행동양식을 구속할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 (다)는 아마존 강 유역에 살고 있는 조에 족의 독특한 문화적 전통(턱에 뽀뚜루라고 불리는 나무를 꽂고 다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조에 족에 속한 개인들은 그러한 전통에 구속되어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사회실재론의 주장을 잘 뒷받침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 (라)와 (마)는 (가)의 사회실재론적 주장에 상반되는 사회명목론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이다. (라)는 히잡 쓰기를 거부한 채 사우디에 방문한 독일 여성 장관 라이엔의 행보를 보도한 언론자료인데, 라이엔의 행동에는 여성에게 히잡 착용을 강제하고 있는 사우디의 불합리한 사회문화적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 라이엔의 행동을 볼 때 사회의 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개인은 종종 사회에 묻힌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주체적 존재임을 주장하는 사회명목론적 주장을 뒷받침 한다고 볼 수 있다.

- (마)는 한 공무원 조직의 불합리한 관행을 고발한 내부고발자의 행적을 소개한 언론사 보도자료로서, 개인은 사회(조직도 협의의 사회로 볼 수 있음)에 압도당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 구조와 역사를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라는 사회명목론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3. 채점기준 및 참고사항

- 개인의 윤리적/비윤리적 의사결정과 행동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묻는 질문으로, 본질적으로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체로서의 개인과 사회를 설명할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비판적이고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사회명목론과 사회실재론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각 이론이 주장하는 내용을 기술하였으면 득점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4. 예시답안

(가)는 UN파견 대사들의 위법행위는 대사들 출신국가의 부패인식지수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주장인데, 이는 개인의 행위가 전적으로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회실재론'적 주장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한 사회의 제도나 이념 등이 개별 구성원의 의식과 행동을 구속하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사회를 중심으로 사회현상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하는데, '사회명목론'에 따르면 사회는 그저 개인들의 모임에 지나지 않는 명목적인 존재이며, 개인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사회현상은 개인의 심리적 요소나 행위 양식을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고, 종종 개인이 사회 구조와 역사를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접근방법은 두 이론의 통합적인 해석이다. 즉,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형성된 윤리적 가치나 규범 등을 다소 수동적으로 따르기도 하지만 개인이 항상 그러한 사회적 영향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UN파견 외교관의 주차위반행위의 원인을 전적으로 출신국가의 부패 문화로 귀속시키는 것은 올바른 접근 방식이 아니다. 가령, 부패한 국가에서 파견된 외교관도 성장과정에서 확고한 개인의 윤리의식을 소유하게 되어 윤리적 행위를 할 수 있고, 반대로 청렴한 국가에서 파견된 외교관도 성장과정에서 왜곡된 윤리의식을 습득하여 비윤리적 행위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두 교수의 주장처럼 사회가 개인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수단의 외교관 보다 이집트의 외교관의 주차위반 건수가 더 많아야 하지만 오히려 더 적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덴마크나 스웨덴 출신의 외교관들의 주차위반 건수가 한 건도 없는 반면에, 수단과 이집트 출신 외교관의 위반 건수는 무려 130여건(평균)이나 차이가 난다는 점을 보면, 외교관의 비윤리적 행위를 온전히 외교관 개인의 도덕성의 차이로만 설명하기에는 역시 한계가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